

Issue & Brief

서울시 정신 재활시설 현황

제4호 (2020-04)

발행일 / 2020. 12. 18.

발행처 / 서울시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발행인 / 이해우

ISSN / 2734-1714

이메일 / smhc-advisory@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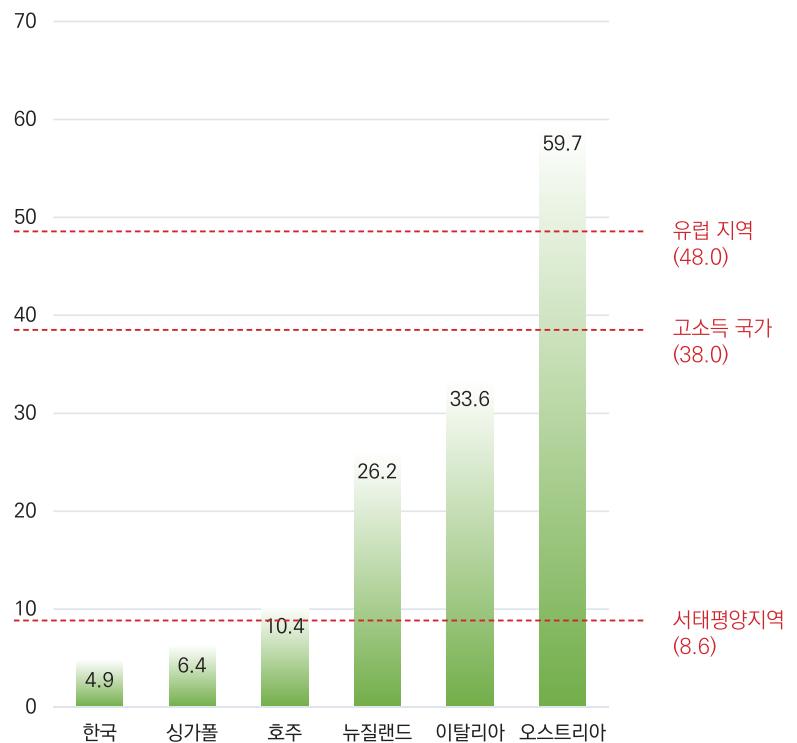
연락처 / 02-3444-9934(직통연결7번)

누리집 / <https://blutouch.net>



WHO 국가별 지역사회 기반 거주시설 비교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정신건강 서비스 자원의 주요한 지표 중 하나로 국가별 지역사회 기반 거주시설¹⁾ 정원을 분석하였다. WHO 분석에서 국가별 데이터를 살펴보면, 인구 10만 명당 지역사회 기반 거주시설의 정원은 지역별로 다소 다른 결과를 보였다. 유럽의 경우 평균 정원이 48.0명(중앙값 42.3명)으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우리나라가 속한 서태평양(WPR) 지역의 평균 정원은 8.6명(중앙값 5.6명)이었으며, 이중 서태평양 지역 고소득 국가의 평균 정원은 10.2명이었다. 우리나라의 평균 정원은 4.9명으로 서태평양의 평균에도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최소한 서태평양 지역 평균값을 목표로 지역사회 기반 시설 정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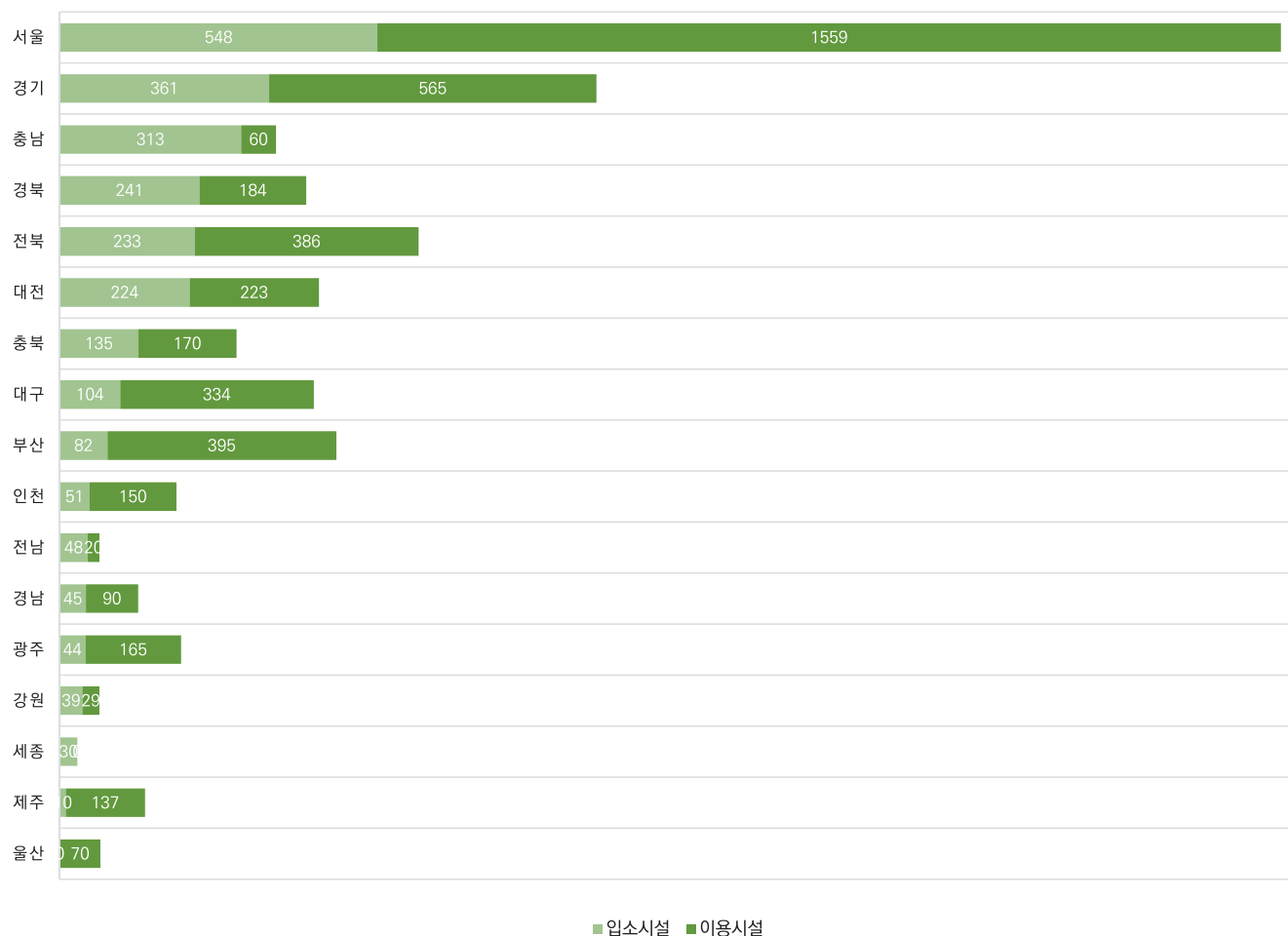


[그림1.] WHO 국가 지역사회기반 시설 정원

1) 지역사회 기반 거주시설: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정신건강 시설로, 일반적으로 집중적인 의학적 개입이 필요 없는 비교적 안정적인 정신장애가 있는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함. 그룹홈, 24시간 간호직원이 있는 시설, 중간집, 치료공동체 등이 포함되며, 정신병원 내 주거시설 및 요양시설은 제외됨.

시도별 입소 및 이용시설 정원

우리나라의 총 정신 재활시설 수²⁾는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총 349개소이며, 서울은 112개소다. 이 중 입소시설의 정원은 2,508명, 이용시설의 정원은 4,537명으로, 전체 7,045명이 이용할 수 있었다. 전체적인 정원은 서울이 2,107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기 926명, 전북 619명 순이었다. 가장 적은 입소 및 이용시설을 가진 지역은 세종이다.



[그림2.] 시도별 입소 및 이용시설 정원

시도별 인구 10만 명당 입소 및 이용시설 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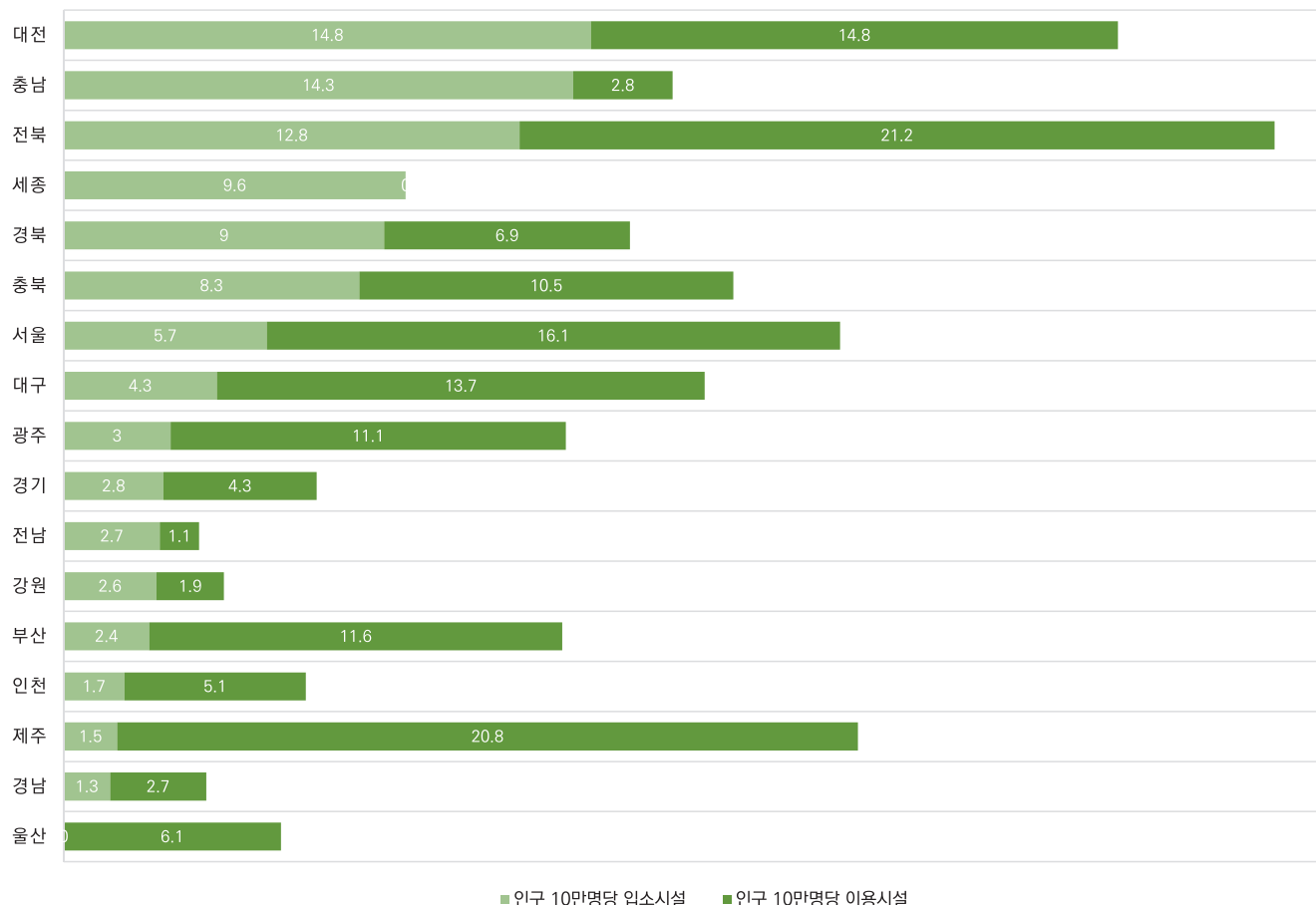
지역별 정신 재활시설의 서비스 제공량을 비교해 보기 위해,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정원 수³⁾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인구 10만 명당 정신 재활시설의 평균 정원은 14.6명(입소 정원 5.7명, 이용 정원 8.9명)이었다. 인구 10만 명당 입소 및 이용 정원 모두 상위권인 지역은 전북과 대전이었고, 서울은 4위를 차지했다. 중증 정신질환자가 퇴소 또는 퇴원 후 지역사회에 제대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정신 재활시설 등 다양한 인프라가 필요하지만, 정신 재활시설은 부족하고 지역 편차도 큰 편임을 알 수 있다. 인구 10만 명당 정신 재활시설 정원이 가장 낮은 3개 시도는 전남(3.8명), 경남(4명), 강원(4.5명)이었으며, 이 지역들의 경우, 전국 평균인 14.6명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19.

3)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정원 수 = 지역 내 정신 재활시설(입소, 이용) 정원 수/지역 내 주민등록 인구수×100,000

또한 시도별 입소시설과 이용시설 간의 편차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전 지역 같은 경우 입소시설과 이용시설의 비율이 거의 비슷했던 반면, 특정 지역(경북, 충남, 세종)에서는 입소시설의 비율이 이용시설의 비율보다 높은 곳들이 있었고, 일부 지역(세종, 울산)은 입소시설이나 이용시설이 전혀 없는 지역도 있었다.

하지만, 장애인 복지시설⁴⁾을 살펴보면 정신 재활시설과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은 인구 10만 명당 67.9명,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은 34.8명이었다. 이 외에도 장애인 복지관, 주간 보호시설 등을 감안하면, 인구 10만 명당 장애인 복지시설 정원 수는 정신 재활시설 정원 수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장애인 복지시설을 정신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신체장애를 가진 장애인에 비해 정신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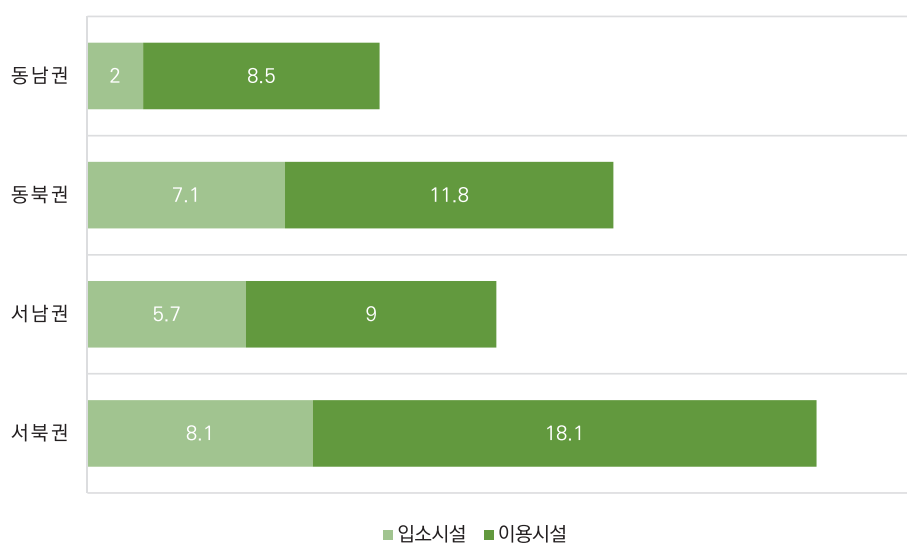


[그림3.] 시도별 인구 10만 명 당 입소 및 이용시설 현황

4)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및 시행규칙 41조 의거, 장애인 거주시설(장애 유형별 거주시설,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 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 거주 시설,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 수련시설 등),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장애인 보호 작업장, 장애인 근로 사업장, 장애인 직업 적응 훈련시설), 장애인 의료 재활시설, 장애인 생산물 판매시설이 있음.

서울시 권역별 인구 10만 명당 입소 및 이용시설 인원

서울시를 생활권인 4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동북권(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성북구, 동대문구, 성동구, 중랑구, 광진구), 동남권(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서북권(은평구, 종로구, 서대문구, 마포구, 중구, 용산구), 서남권(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금천구, 관악구)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생활권 내 인구 10만 명당 입소시설 및 이용시설을 살펴보면, 서북권이 26.2명으로 가장 많았고, 동남권이 10.5명으로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개 중증 정신질환자가 이용하는 입소시설 및 이용시설 요구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권역별 중증 정신질환자 수 대비 필요한 입소시설 및 이용시설 수요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할 수 있다.



[그림4.] 서울시 4개 권역별 인구 10만 명당 입소 및 이용시설 인원

서울시 정신 재활시설에 대한 제언

정신질환자에게 정신건강 서비스 시설은 탈원화 후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줄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 할 수 있다.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서울시 정신 재활시설 현황⁵⁾을 살펴보면, 서울에 1곳의 종합시설, 3곳의 중독자 재활시설, 25곳의 주간 재활시설, 63곳의 공동생활 가정, 4곳의 지역사회 전환시설, 5곳의 직업 재활시설, 11곳의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시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서울의 입소 및 이용시설은 4위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WHO에서 조사한 국가별 지역사회 기반 거주시설 정원과 비교해 보면, 한국은 4.9명으로⁶⁾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이 속한 서태평양 국가 평균인 8.6명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2017년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기반으로 한 탈원화 정책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서울시는 정신 재활시설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5)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 정신건강 현황 보고서, 2019.

6) 2016년 기준 4.9명, 2019년 기준 5.7명.

첫째, 서울시 자치구별 중증 정신질환자 수 및 요구 파악이 시급하다. 정신건강 서비스는 이용자 또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요구한다. 따라서 정신건강 서비스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쉬워야 하며, 근거에 기반을 둔 양질의 서비스여야 한다. 또한, 자치구별 지역에서 필요한 중증 정신질환자 시설은 다를 수밖에 없기에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서울시 권역별, 자치구별 정신 재활시설 수요 예측이 필요하다. 정신건강 서비스는 예방과 조기개입, 치료 및 보호, 재활 그리고 회복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층위의 서비스를 요구한다. 따라서, 권역별, 자치구별 중증 정신질환자 수와 요구에 따라 지역 내 필요한 정신 재활시설의 수요 예측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중증 정신질환자 요구 파악 및 정신 재활시설 수요 예측을 기반으로 정신 재활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자치구별로 보유하고 있는 정신건강 복지 자원은 다양하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신 의료기관, 정신건강 복지센터, 정신 재활시설,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그리고 정신 요양시설 들 간의 일부 서비스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권역별, 자치구별 필요한 정신 재활시설에 대한 청사진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 고민하여, 필요한 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